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7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28.

다. 회 부 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 2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면제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30년 12월 31일</u>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이만희의원안 2026. 1. 28. 발의(의안번호 16370)

☐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1972년 신설된 것으로, 당초 연근해어업용 선박 선박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6년에는 농업

용 기계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1990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 석유류를 추가하였음. 또한 1999년부터 일몰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2012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2012.1.2.)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8,954억원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는 감면세액이 2025년 9,846억원, 2026년에는 1조 10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세 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부가가치세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4,218
개별소비세	289	376	276	239	232	271	279
교통·에너지·환경세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4,697
교육세	1,243	1,169	794	739	780	886	910
소 계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10,104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2024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경유가 1,626천kl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등유 340천kl, 휘발유

190천kl 순을 보이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천kl)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휘발유	211	202	201	194	189	190
경유	1,782	1,855	1,766	1,666	1,662	1,626
중유	42	44	38	34	20	19
윤활유	8.3	8.3	8.1	7.1	7.1	7.2
LPG	11	15	17	19	18	19
등유	446	442	440	422	349	340
부생연료유	-	-	-	-	28	26
합 계	2,500	2,567	2,472	2,344	2,274	2,228

자료: 재정경제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농·임·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농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0년	45,029	62.2	53,187	73.5	37,105	51.3	72,362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동 제도를 통해 농·임·어업인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농업·임업·어업 생산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임·어업인들의 가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둘째, 농·임·어업 생산물이 지니는 필수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조세특례는 농·임·어업 생산이 유발하는 연쇄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을 줄여 농·임·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면서 국민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면세유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나라 정부 및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면세유 정책은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ETS,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으로 면세유 지원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¹⁾

World Bank(2023)는 농·어업 분야 등에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이 환경 친화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 2배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비환경적 재정운영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OECD(2025)는 연료관련 세금 환급 등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은 가격을 왜곡하고 자원 할당 결정을 왜곡하여 예측되지 못한 혹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음.

즉, 면세유 지원 정책의 일몰 연장은 농·임·어업인 등에게 유류 소비에 대한 잘못된 가격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경제적 왜곡을 유발하여 비효율성 및 비용을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될 수 있음.

둘째, 간접세 면제 제도는 과세형평성 및 정책적 효과성에 기반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농·임·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므로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

1)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23.

하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과세형평 제고, 조세정책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을 위해 면제 도입의 효과성과 정책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임·수산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여 농·임·어업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가 농·임·어가의 생산성 및 소득 증대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만한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²⁾

□ 한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인바,³⁾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 도래하므로 일몰연장의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2)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23.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4)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 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4년 연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7